

업무계획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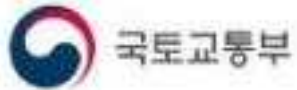

※ 엠바고 : 3.7일(목) 15시 이후 온라인, 3.8일(금) 조간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보도자료 -

2019. 3. 8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9. 3. 7.(목) 총 47매(본문 11, 붙임 36)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과장 김헌정, 서기관 최아름, 사무관 위은환, 문기성 ·☎ (044) 201-3197, 3205, 3203 ※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12페이지 참조	
보 도 일 시	2019년 3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7(목) 15:00 이후 보도 가능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노후 SOC 관리를 혁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 연결해 주는 플랫폼 시범 구축
-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M-버스 운행범위 확대, 철도·항공 서비스 지연보상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 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 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1.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 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 수소경제	△ 스마트시티	△ 드론	△ 자율차
△ 스마트건설	△ 제로에너지건축(ZEB)	△ 데이터경제	

- ①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제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2천대를 도입*한다.

* 수소버스 전환 운영 보조, 면허기준 완화 등 혜택을 강화

-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19,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1년 건립 세종 신(新)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하여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선다.

- ②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19.4, 접수·발표)한다.

* '지자체+기업 등'이 문제분석, 사업계획 및 실증 등을 자율 기획(15억 원 x 6개소 지원)

- ③ 자율차 레벨3 상용화('20)에 대비하여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세종 정부청사, '19.10)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완성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19.1~, 지구지정)

④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사업 컨설팅 및 규제특례 등 종합 지원

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한다.

□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①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 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②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18, 25.4억 박스)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년 '화물차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하여 원가조사와 충분한 업계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을 공표('19.10)한다.

③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하여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 ④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 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리츠를 활성화한다.

□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 '19년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천 5백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18.5)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하여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분야 '先선발-後교육'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

2. 국민안전 :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30년 이상 시설물(%) : ('18) 3,498개(11.1%) → ('28) 8,499개(27.0%) → ('38) 19,384개(61.7%)

-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대상 :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수도·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 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19.9)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 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19.12)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 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km/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하여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

3.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영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 의무화, 건설 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 공급,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 * 예 : (도서관) 현행 1곳/3만 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 단지」(가칭)를 조성(교육부 공동)하여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 *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마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확정(‘19.11) 자율주행·환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 착수(‘19.6)

4. 안정적 주거여건 :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

-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5만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 ①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 임대 6천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천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 ②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 ③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 ④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하여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신청~입주 : 2개월→7일) 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 등('19.3, '입주자 관리지침' 제정)

-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 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 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5. 교통 서비스 향상 :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 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교통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 천안-논산('19.12)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확대*한다.

* ('18) 세종·울산·전주시 → ('19) 경기·인천 등 수도권

○ '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SNS를 활용하여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SNS로 이용자가 연계 교통편 현황파악, 예매 등 가능('19.9)

○ 공항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하고,

▪ 탑승수속 시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하고,

▪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합조사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을 집계 기준을 상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후 하기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하여 도입하고 정부 지원의무 설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속·시의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최아름 서기관(☎044-201-3197) 및 과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	-----	-----

1. 2019년 역점 추진과제

① 전방위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 혁신성장(총괄)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	김태형 과장 유훈 사무관	044-201-3258 3260
▪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총괄)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	김태형 과장 나은종 사무관	044-201-3258 3261
▪ 데이터경제	정보화통계담당관	문석준 과장 이대희 사무관 정태현 사무관	044-201-3265 3268 4127
▪ 수소도시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 안세희 사무관	044-201-3706 3720
▪ 스마트시티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 정재원 사무관	044-201-4845 4097
▪ 제로에너지건축(ZEB)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 김준 사무관	044-201-3769 3769
▪ 건설혁신	건설정책과	김영한 과장 문종민 사무관	044-201-3504 3497
▪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정책과	김성호 과장 이진우 사무관 김동현 사무관	044-201-3516 3517 3524
▪ 스마트건설	기술정책과	엄정희 과장 서정관 서기관	044-201-3549 3557
▪ 수소 대중교통 육성	교통정책조정과	강주엽 과장 나민희 서기관	044-201-3804 3792
▪ 자율차 육성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 김진후 사무관	044-201-3847 3848
▪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물류산업과	김완국 과장 김민선 사무관	044-201-4016 4018
▪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 박정곤 사무관	044-201-3993 3998
▪ 버스 전문인력 양성	대중교통과	김기대 과장 장기영 사무관	044-201-3823 3824
▪ 드론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 서정석 사무관	044-201-4307 4253
▪ 항공산업 : 건전한 산업기반 조성 및 신규 사업 발굴	국제항공과	신윤근 과장 황성필 사무관	044-201-4207 4211
	항공산업과	김도곤 과장 노지훈 사무관	044-201-4219 4223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사천 산단 중심 MRO 사업 본격 착수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 최수영 사무관	044-201-4307 4225
▪ 조종사 '先선발-後교육' 규모를 확대하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	항공안전정책과	정의헌 과장 최진호 사무관	044-201-4244 4248
▪ 충전인프라 고속도로 충전소 구축	도로정책과	이용욱 과장 서지웅 사무관	044-201-3875 3887

②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겠습니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김부병 사무관	044-201-3755 3765
▪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한동균 사무관	044-201-3755 3758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최대경 사무관	044-201-3755 4082
▪ 근로현장의 작업자 안전 제고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 박정규 사무관	044-201-3538 3542
▪ 건설현장 추락사고 저감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 허원석 사무관	044-201-3573 3574
▪ 건설공사 굴착공사전 계측계획수립 강화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 허원석 사무관	044-201-3573 3574
▪ 부실 감리자 처벌 강화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 장은석 사무관	044-201-3573 4592
▪ 소규모시설물 3종 지정 근거 마련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 이기세 사무관	044-201-4598 3587
▪ 택배 작업환경 개선	물류산업과	김완국 과장 김대성 사무관	044-201-4016 4025
▪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인프라 구축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홍철 사무관	044-201-3862 3863
▪ 항공 승무원 피로관리 및 방사선 피폭량 실측	항공운항과	김상수 과장 민병우 사무관 강정현 사무관	044-201-4259 4268 4312
▪ 항공안전 지표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 확대	항공안전정책과	정의헌 과장 이상곤 사무관 강경범 사무관	044-201-4244 4251 4255
▪ 회항 등 돌발상황 신속지원을 위한 모의훈련 등 범부처 협업	항공산업과 항공운항과	김도곤 과장 홍일산 사무관 김상수 과장 강정현 사무관	044-201-4219 4231 044-201-4259 4312
▪ 고위험 고속도로 작업장의 사고방지종합대 마련	도로정책과	이용욱 과장 신우철 사무관	044-201-3875 3875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국토교통 유관 공공작업장 안전강화	혁신행정담당관	김정희 과장 김민정 사무관	044-201-3213 3216
▪ 철도안전 관리 강화	철도시설안전과 철도운행안전과	김유진 과장 이성민 사무관 송시화 과장 박해규 서기관	044-201-4623 4624 4611 4613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 이은영 사무관	044-201-3674 3663
▪ 판교2밸리 기업성장센터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 이은영 사무관	044-201-3674 3663
▪ 진주·사천·밀양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 남순두 주무관	044-201-3674 3678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 이종찬 사무관	044-201-3662 3665
▪ 새만금	복합도시정책과	성호철 과장 엄지희 서기관	044-201-3684 3689
▪ 행복도시	복합도시정책과	성호철 과장 윤희근 사무관	044-201-3684 3686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 김기훈 서기관	044-201-3646 4950
▪ 남북 경협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 곽병철 사무관	044-201-3646 3651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정책과	정우진 과장 조민우 서기관	044-201-4903 4904
▪ 교통분야 중장기 계획 마련	교통정책조정과	강주엽 과장 나민희 서기관	044-201-3804 3792
▪ 제주·대구·김해·청주 등 거점공항 시설확충	공항정책과	박연진 과장 김춘수 사무관 심동휘 사무관	044-201-4328 4335 4337
▪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 갈등관리 및 기본계획 고시	신공항기획과	주종완 과장 김진성 사무관 전진 사무관	044-201-4137 4142 4138
▪ 국제항공로 신설 등 협의추진	항공교통과	유경수 과장 김남극 사무관	044-201-4294 4299
▪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간선도로과	이정기 과장 정경인 사무관	044-201-3888 3891
▪ 철도망 확충	철도건설과	임종일 과장 홍석표 사무관	044-201-3950 3961
▪ 남북경협 단계적 이행	철도건설과	임종일 과장 이창훈 서기관	044-201-3950 3951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4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 김종오 사무관	044-201-4539 4514
▪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 이민규 사무관	044-201-4539 4580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공급	공공주택지원과	김영혜 과장 홍승희 사무관	044-201-4530 4533
▪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공공주택지원과	김영혜 과장 홍승희 사무관	044-201-4530 4533
▪ 고령자 복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주택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 신동하 사무관	044-201-4539 4517
▪ 주거급여 지원 강화	주거복지정책과	김석기 과장 박송이 사무관	044-201-4504 3358
▪ 맞춤형 주거 금융지원 강화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 염광은 사무관	044-201-3337 3341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 김종오 사무관	044-201-4539 4514
▪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	주거복지정책과	김석기 과장 좌명한 사무관	044-201-4504 4740
▪ 사회주택 활성화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 양정선 사무관	044-201-4100 4109
▪ 부동산 거래단계별 질서 확립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 나정재 사무관	044-201-3398 3402
▪ 공모 상장 리츠 활성화	부동산산업과	하창훈 과장 김중한 사무관	044-201-3411 3414
▪ 빈집정보은행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 최승연 사무관	044-201-3383 3387
▪ 분양가상한제	주택정책과	이명섭 과장 유용일 사무관	044-201-3317 4089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 박현근 사무관	044-201-3337 3338
▪ 입주前 사전방문제도 및 품질점검 강화 등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권호정 사무관	044-201-3364 3369
5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대광위준비단	유혜령 팀장 이경호 사무관	02-3771-6334 6335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과	김기대 과장 김종욱 사무관	044-201-3823 3832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시외버스 정기권 등 상품개발	대중교통과	김기대 과장 김종욱 사무관	044-201-3823 3832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교통정책조정과	강주엽 과장 나민희 서기관	044-201-3804 3792
▪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 나귀용 사무관 유연형 사무관 최수관 사무관	044-201-3835 3840 3843 4996
▪ 교통약자 및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정규철 사무관	044-201-3862 3870
▪ 100원 택시 확대	택시산업팀	윤종빈 팀장 문영훈 사무관	044-201-4770 4756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도로투자지원과	박병석 과장 김병철 사무관	044-201-3897 3906
▪ 민자고속도로 관리감독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합리화	도로투자지원과	박병석 과장 천지민 사무관	044-201-3897 3898
▪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도로정책과	이용욱 과장 이윤우 서기관	044-201-3875 3881
▪ 수하물 위탁 서비스 시범운영,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탑승수속 서비스 확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 김규희 사무관 조중범 사무관	044-201-4232 4238 4233
▪ 항공기 지연율 기준 및 환불규정 개선	항공산업과	김도곤 과장 박춘식 사무관 홍일산 사무관	044-201-4219 4224 4231
▪ 항공교통약자 편의기준 시행	항공산업과	김도곤 과장 홍일산 사무관	044-201-4219 423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급속도 제고	민자철도팀	나진항 팀장 이광민 사무관 박정란 사무관	044-201-3988 3982 3983
▪ 기존선 개량	광역도시철도과	이우제 과장 김인규 사무관	044-201-3958 3959
▪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철도운영과	박지홍 과장 김성진 사무관	044-201-3970 3975
▪ 열차지연 추가교통비용 보상 확대	철도운영과	박지홍 과장 박영주 사무관	044-201-3970 4632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	-----	-----

2. 신규 발굴 과제

① 수소경제 :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통한 자생적 성장			
▪ 행복도시 수소 충전소	복합도시정책과	성호철 과장 윤희근 사무관	044-201-3684 3686
▪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 안세희 사무관	044-201-3706 3720
▪ 수소 복합환승센터 구축	도시광역교통과	박건수 과장 박미희 주무관	044-201-3797 3807
▪ 수소버스 인센티브 연구	대중교통과	김기대 과장 김종욱 사무관	044-201-3823 3832
▪ 수소버스 안전기준 R&D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 이양구 사무관	044-201-3847 3852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9년 10기 착공	도로정책과	이용욱 과장 서지웅 사무관	044-201-3875 3887
② 생활안전 중심의 SOC 관리 강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마련 ▪ (범부처TF 운영, 위협요소 발굴, 신속 보강, 개선방안 및 투자확대 계획 등)	기술정책과	엄정희 과장 김동익 팀장 성언수 사무관	044-201-3549 4990 4997
▪ 기반시설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기술정책과	엄정희 과장 오송천 서기관	044-201-3549 3550
▪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공통기준 마련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 이용재 사무관	044-201-4598 4594
▪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고도화 (인프라 총조사 등)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 이용재 사무관	044-201-4598 4594
▪ 지하공간통합지도 확대 및 정보 추가, 활용도 제고	공간정보진흥과	김태경 과장 황병철 사무관	044-201-3469 3474
③ 교통·물류 新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 최용현 서기관	044-201-3993 3994
▪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 나귀용 사무관	044-201-3835 3840
▪ 택시서비스 다양화	택시산업팀	윤종빈 팀장 문영훈 사무관	044-201-4770 4756
▪ 2030 모빌리티 로드맵	신교통개발과	박준상 과장 임은애 주무관	044-201-4770 3821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국토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간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19.1~
	■ 수소 시범도시 조성	■ 수소 기반의 주거·교통 등이 구현되는 시범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도시 선정	'19.下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기업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추진	'19.1~
	■ 도시 새뜰마을 사업	■ 도시 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의 지원지역 및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주민과 함께하는 협업모델 창출('19년 30곳 선정)	'19.1~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성능보강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학원·고시원·산후조리원·목욕탕	'19.3~
	■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 거점지역을 주거·상업·산업 기능 등이 융복합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도시재생법 개정 필요)	'19.下
	■ 생활SOC 선도사업	■ 각 부처의 생활SOC(커뮤니티케어, 공동육아 나눔터, 도서관 등)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 시설(어울림센터) 시범사업 시행(20곳 내외)	'19.3~
혁신도시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비율이 확대('18년,18%→'19년, 21%)되어 지역학생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19.1~
	■ 혁신도시 맞춤형 교통 모델 도입	■ 혁신도시 맞춤형 교통 모델 도입을 위해 충북혁신 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합니다.	'19.6~
	■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추진	■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광역화를 우선 추진하여 보다 많은 지역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19.6~
주택	■ 주거급여 지원강화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중위소득 43% → 44%) * ('18) 1인가구 71.9만원/4인가구 194.3만원 → ('19) 75.1만원/203만원 ■ 급여지급 상한(기준임대료) 인상(전년 대비 5.0~9.4% ↑) * ('18) 지역·가구원수별 14~40.3만원 → ('19) 14.7~44.1만원	'19.1~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출시	■ 대부분 청년들의 주택점유형태가 보증부 월세인 것을 감안하여 보증금과 월세금을 동시 대출하는 상품 출시	'19.1~
	■ 신혼희망타운 공유형모기지 출시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1.3%의 고정금리로 4억원까지 구입자금 대출지원	'19.1~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등록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임대주택 등록여부 설명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등록임대여부 체크 의무화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대출 절차간소화 및 자산심사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로 수집하는 등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 제고 무주택 서민층에게 기금대출의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산심사기준을 도입 	'19.下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사 임금 직불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청이 하도급사 선정시 설계서, 공사물량, 공기 등 입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의무 공개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적(5년이내 3회)으로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건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초과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 안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공공공사 시스템작업대를 의무 사용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승인받지 않은 건설업체는 벌칙, 상기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은 과태료 신설 발주청은 적정감리인원 배치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공사기간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단축(68→52hr), 안전·환경 규제강화, 폭염·미세 먼지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시행하여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 	'19.3~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3.19)함에 따라 광역교통권 출퇴근 시간 단축 및 편리한 환승·연계 시스템 도입·개선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 교통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 도입 확대, 100원 택시 확대 등 추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도입 	'19.上 '19.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차주 적정운임 보장 및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차 안전운임제 공표, 물류신고센터 설치·운영, 휴게시간 보장 등 택배 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19.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시서비스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시 브랜드화 유도과 플랫폼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택시서비스 경쟁력 향상 	'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운전직 처우개선, 버스 노선체계 및 운영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추진 	'19.上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버스 이용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액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기간 확대(現 월~목 → 주말 포함) 및 발급방법 개선(별도 홈페이지→매표시스템)을 통해 고속버스 이용객 부담완화 * 정액권(free-pass) : 일정한 금액(75,000원/1장)을 미리 지불하여 주중(월~목) 고속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자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교환·환불요청 가능 	'19.1~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별 특성에 따른 드론 활용모델 상용화를 유도하는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운영 위험도·성능 중심의 드론 분류기준을 정립하고,승인·신고·자격 등 드론규제 차등화 방안 마련 공공분야 드론구매를 확대(올해 1,000대 구매)하고, 활용 촉진을 위한 임무특화교육 개발·실시 	'19.7~ '19.12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늘길 확대로 항공 교통 이용자 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Km)'의 항공로 복선 운영을 통해 중국·유럽행 항공편 지연 감소 및 항공안전 제고 * (기대효과) 교통밀집시간대(11-15시)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이 빈번한 유럽행노선의 지연율이 12%(2,188편) → 7%대(1,276여편) 크게 감소예상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장 면세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을 시범도입(T1 2개소, T2 1개소)하여 운영 착수(중소기업 면세점 업체 운영) 	'19.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레저스포츠 업체 자본금 요건 완화 * (현행) 4천 5백만원 이상 → (변경) 3천만원 이상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야 했지만, 호텔에서 짐 부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이용객에 한함) * 호텔 시범운영을 거쳐 자택 수하물 위탁서비스로 확대예정 	'19.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트북·액체류를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탑승수속시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 도입 운영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시범운영 	'19.7 '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 장학재단 "하늘 드림재단" 본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비 대출지원 등 항공기 조종사 꿈나무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정부양성프로그램(先선발 後교육)을 통해 선발된 조종사 훈련생 중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 대상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사 임원자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관련법령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관세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시에도 임원제한(3→5년), 벌금형에도 임원제한(2년) 	'19.9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도로	■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휴게소·환승주차장 224개소('17.9월)에 이어 졸음쉼터·주차장 휴게소 등 추가 248개소 확대 * 통신사 상관없이 Wi-Fi 서비스(100Mbps) 이용 가능해 통신비 절감 	'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시간 제약 및 매장대기 없는 주문·결제환경 구현 * 고객대기시간 단축 및 혼잡시간대 고객분산 효과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해 맞춤형 휴게시설인 화물차 라운지를 경부선 안성휴게소 등 10개소 개설 	'19.下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승용차, 최정거리 기준 3,800원(1.23배)→3,600원(1.16배)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1.1배) 검토 	'19.下
■ 완공 중심의 간선도로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46개(969km), 국도 162개(1,464km) 등 총 318개(3,149km) 사업추진 - 이 중 서평택-평택, 새천년대교 등 29개 사업 220km 개통 	'19.下	
철도	■ 철도 무료 WiFi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무궁화호를 시작으로 '21년까지 모든 여객역사와 열차 내에서 무료 WiFi 제공 	'19.下 ~
	■ SRT 병합 승차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구간 좌석이 매진이라도, 입석+좌석, 좌석+좌석으로 승차권을 1매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자동 안내 	'19.12 ~
	■ 철도 종합시험선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내수·수출용 차량 등에 대한 성능검증이 가능한 시험선로 본격 운영 	'19.3~
	■ SRT 공공할인제도 확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청소년이 SRT 예발매 시 할인 시행 	'19.1~
	■ 국가귀속 민자역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서울역사 내 청년 외식업 창업지원센터(칙칙쿡쿡) 본격 운영 	'19.1~

참고 3

2019년 착공·준공되는 주요 사업

구분	사업명	시기	사업비	기대효과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착공식 	'19.12 (잠정)	3.7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신기술 및 서비스를 접목한 혁신 산업육성·일자리 창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협력형 지원사업 (새뜰사업 연계) 	'19.12 (잠정)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주택 개선) 주거 취약지역 내 200채의 위험주택 정비 (주민돌봄) 복지전문기관과 함께 사회적약자 맞춤형 돌봄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지원 종료 후에도 마을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모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뉴딜사업 ('17년 선정 50곳 '18년 선정 99곳) 	'19.1~	12,5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혁신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착공(일부는 '20년 착공) 	'19.下	2,938억원 (국고1,08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여건 개선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착공 	'18.下	33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생산 인증 지원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공항 시설개선 	'19.6	1,63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터미널 확장 등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2,589→3,175만명/년) 되어, 혼잡완화 및 편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공항 시설개선 	'19.12	25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선 터미널 확장(189→289만명/년) 등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이용객 편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공항 시설개선 	'19.12	34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빌딩 신축(5,192→6392면) 사업이 완료되어 주차난 해소 등 이용객 편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 인증센터 착공 	'19.下	3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으로 드론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 종합실기시험장 착공 	'19.下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증하는 자격응시수요 상시 수용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준공(3개소) 및 시범운영 	'19.上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 등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드론제작·활용분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항공박물관 준공 	'19.12	94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 줄 국립항공박물관 (위치: 김포공항 내)이 '19년 말 준공되어 '20년 3월 개관 예정

구분	사업명	시기	사업비	기대효과
도로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3기 준공('18년 착공분)	'19.3	- (도공 및 현대차 자체)	■ 친환경 수소차의 자유로운 고속도로 이동 가능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5기 준공('18년 착공분)	'19.5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10기 착공('19년분)	'19.12	75억원	■ 수소경제 진입속도 가속화에 기여
	■ 서울-세종(세종~안성) 고속도로 착공	'19.12	24,764억원	■ 서울-세종 전 구간 개통 시, - 서울-세종 70분대로 단축 - 국가균형발전 지원 및 경부·중부 고속도로 교통정체 완화
	■ 양평-이천 고속도로 착공	'19.12	8,548억원	■ 수도권순환망 구축 및 중부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정체 완화 * 양평-이천 구간 통행시간 28분 단축(40→12분)
	■ 서평택-평택 서해안선 확장 개통	'19.12	1,145억원	■ 고속도로 정체구간 확장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평택항 물동량 효율적 처리 * 통행속도 증가(66.8→89.1km/hr)
철도	■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19.下	33,465억원	■ 시흥시청~여의도(53분→22분) ■ 한양대~여의도(100분→25분, 급행기준)
	■ 진주-광양 전철화 착공	'19.12	2,402억원	■ 비전철의 전철화로 남해안축(부산~목포간) 열차운행 일관성 확보, 철도이용자의 이동시간 단축 및 편리성 확보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준공	'19.下	1,702억원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와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 문산~임진각 전철화 사업 준공	'19.下	388억원	■ 문산~도라산 전철화를 통해 수도권 전철 운행 확대

1.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 **(성장동력)** 대타협을 통해 건설·운수산업 체질개선 및 미래 대비
 - ▶ 업역규제 폐지·임금체불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 화물차안전운임 도입('20년 시행)
 -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 K-City 완공, 남북 도로·철도 착공식('18.12)
 - **(생활·안전)** 서민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건설·교통사고 감소
 - ▶ 투기수요 차단(9.13)·공급확대(9.21, 12.19) 등을 통해 전국 주택시장 안정세, 공공주택 21.3만호 공급 및 등록 민간임대 전년 대비 39% 증가('18, 136.2만채)
 - ▶ 3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970억원/年 경감), GTX-A 착공 등 사업 가속화
 - ▶ 타워크레인 사망 無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42년만에 3,800명 아래로 감소
 - **(균형발전)** 새만금·도시재생 등 지역 자립역량 강화 본격 추진
 - ▶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공사 설립('18.9), '혁신도시 시즌2' 추진
 - ▶ 도시재생뉴딜 사업 18곳 착공, 99곳 신규 선정('18.8) 등 사업추진 박차
- ☞ 여러 성과 속에서도 철도·항공·기반시설 등 연이은 안전사고, 카풀-택시 新-舊 업계간 갈등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 필요

2. 주요 업무계획

◇ 국토교통 산업혁신·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치 창출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안전과 편안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

- ① 전방위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 **7대 혁신기술 확산** : 수소경제·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스마트 건설·제로에너지건축·데이터경제에 시범사업, 규제혁신 등 중점 지원
 - **주력산업 체질개선** : 건설·운수 혁신방안의 현장 안착을 지원 하여 근본적 체질개선 촉진, 생활물류산업·튜닝 등 新산업 육성
 - **좋은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집행률을 제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이행, 건설 분야 등 청년 취업 지원
- ②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겠습니다.
 - **노후 SOC 관리 강화** :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취약요인 선제 발굴 및 전략적·선제적 보강 추진

- **근로현장 안전 제고** : 추락사고·건설기계 등 건설안전 취약분야 집중 개선, 주택·도로·철도 등 공공 작업장·택배현장 등 안전 관리
- **예방적 교통안전** : 도시부 속도 하향 조기 정착, 모바일 DTG 장착 등 교통사고 저감, 철도·항공 현장 대응역량 강화
- ▶ ('19)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를 400명대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200명대 감축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도시재생뉴딜**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혁신지구 지정(3곳 내외)·생활 SOC 공급 등 성과 가시화에 총력, 등지내몰림 예방
- **지역투자 활성화** : 「캠퍼스 첨단 산단」 조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예타 면제 사업 조기 착수 지원,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망 확충
- **균형발전 및 미래비전** : 새만금·행복도시·혁신도시 사업 내실화, 2040 국토·교통 비전 마련 및 남북 경제협력 단계적 추진

④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 **맞춤형 주거지원**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기숙사형 청년주택·고령자 복지주택·취약계층 등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 **주거복지 기반 구축** : 입주자 관점에서 공공임대 유형통합, 대기자 명부 개선, 10년 공공임대 전환을 지원하고 사회적 주택·빈집 활용 확대
-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 정비·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지역 여건에 맞는 시장관리,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및 수도권 택지공급 지속

⑤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광역교통체계 효율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19.3), M버스 확대·Super-BRT 도입('19.10)·GTX 건설 등 인프라 공급 속도 제고
- **교통 이용 편의**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선, 통행료 합리화, 서비스 다양화(연계교통, 공항 수하물 배달 등), ICT 결합형 교통 서비스
- **이용자 권리보호** : BMW 화재 사고에 대응한 리콜제도 혁신 완수, 철도·항공 지연 보상 확대, '교통기본권' 도입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

< 국토도시실 >

1.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 올해는 물리적인 도시조성 착수와 함께, MP가 구상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콘텐츠별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 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시범도시 조성도 중점 추진할 계획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작년 말 시행계획을 수립('18.12)하고 제도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 올해는 실시계획·설계 수립과 착공 등 도시조성을 본격화하고, 각 콘텐츠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 또한 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
 - (규제개선) 작년에 시범도시 관련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도시 내 자유로운 기술접목·실증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
 - (예산지원) 시범도시 내 혁신적인 기술 접목과 기업 유치를 위해 11개 사업, 265억원의 신규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투자폭을 크게 확대해 민간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
 - (민간참여) 113개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19.2)하여 민간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

2. 수소 시범도시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은?

☞ 수소 시범도시의 개념과 콘텐츠를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범도시 선정 계획

- 수소도시의 개념부터 시범도시에 구현될 기술·서비스를 담은 수소 시범도시 모델을 구상 중(R&D 기획연구, '18.11~'19.5 / 고려대·에기연)
 -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범도시 모델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연내 3곳 내외 선정
 -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규모는 시범도시 모델, 재정여건, 민간투자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방안은?

☞ 공공주도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관련 녹색건축법령 등 개정을 추진하겠음

- 아울러, 공공주도로 보다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생활SOC, 신도시, 도시재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도서관, 학교, 공공청사 등 다양한 유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속 확대 보급할 계획

4. 화재, 지진 등 건축물 안전대책이 과거와 달리 기존 건축물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와 관련한 배경은 무엇인지?

☞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을 지속 강화해 왔으나, 실제 사고는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

-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필요
- 이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취약 요인 발굴 및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 올해부터 화재성능보강 지원(72개동)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지진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간소화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표준공법 개발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체계도 제도화할 예정

5. 기존의 산학협력과 (가칭) 캠퍼스 첨단산업단지는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 창업보육 및 연구 중심에 그치는 한계를 벗어나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쏠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 캠퍼스 산단은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쏠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기업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기업 지원 시설, 문화·소통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의 혁신역량과 대학의 우수인력·기술 간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사업 고도화 가능
 - * 향후 창업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소 등도 입주 가능
 - 건물중심의 點 단위 개발에서 벗어난 단지형 面 단위 개발 사업으로 공간을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학 교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6.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현황 및 향후계획은?

-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하였음
- ☞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초에 균형위에서 10개 내외사업을 최종선정할 예정이며, 5월중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예정

□ 현재 신청사업 관련 관계부처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균형위에서 구성한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초에 최종선정할 계획

* 관계부처 타당성검토(~3월초)→ 균형위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및 권역별 발표평가(3월중)→ 최종선정(4월초)

○ 사업선정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컨설팅(4월)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예정(5월)

*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4월)→ 협약체결(5월)→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6월~)

7. 새만금사업에서 올해 가시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 ☞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 사업 통합계획 수립 착수,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 작년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주도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을 금년 하반기 중 착수할 예정

* 사업개요 : 국제협력용지 일부 6.6km²(200만평), 사업비 1.1조원, 기간('18~'24년)

○ 상반기에 예타('18.8~, KDI)가 통과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24년 완공 목표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

□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공사 선도사업(0.3GW) 사업자 공모 및 후속 인허가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관련 기업, 연구기관들이 모이는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

8. '도시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목적이 무엇인지 ?

☞ 지역·산업별 맞춤형 공간지원, 산업육성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산업·경제 기능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 규제완화*, 재정·기금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업무 공간과 주거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세제지원, 통합심의 등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일하기 좋고 거주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 계획임

* 중기부(창업 지원), 과기부(R&D 지원), 산업부(제조업 육성·지원) 등

< 주택토지실 >

1.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과 내용은?

☞ 변화된 부동산 및 금융 시장에 대응하고 공모·상장을 중심으로 한 리츠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

□ 리츠 진입규제는 완화하여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검사·감독 등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하여 투자자를 적극 보호하고자 함

○ 공모·상장 리츠로의 우량자산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 전문 검사·감독 체계 마련, 리츠 등급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2.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은?

☞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추진 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

- 주거복지로드맵('17.11) 및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18.10)에 따라 저소득·취약가구 맞춤형 주거지원방안 시행 중
 -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19, 8만호),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 확대,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권 부여 등
- '19년에는 특히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지원 집중 강화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하고,
 - * '07~'18년 비주택에 거주하는 8,935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임
 - 공공임대 신청부터 입주 전체 과정을 주거복지NGO에서 밀착지원토록 하여, 쪽방·고시원에 살던 분들이 어려움없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年 2회, 방문조사)
 - 또한,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3. 주거급여 대상자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도 인상할 계획

□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 중위소득의 43%('18) → 44%('19) → 45%('20) (주거급여 기본계획, '18~'20)

○ 또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도록 '22년까지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19년 최대 9.4% 인상)

* (서울지역) 1인가구 21.3만원 → 23.3만원, 4인가구 33.5만원 → 36.5만원

○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할 계획

* 편의시설 예시 : 문폭확대, 단차제거, 안전바·높이조절 세면대 등

4. 대기자 명부를 개선하면 입주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가능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입주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입주희망자가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곤란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예고('18.12.31~'19.1.23)에 따라 제출된 지자체·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추가검토 후 3월중 시행 예정

5.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19년에 처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어떻게 다른지?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입주자격도 확대(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 지원단가를 상향(매입 1.5→3억, 전세 1억→2억)하여 자녀양육에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입지가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도 확대(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I·II 비교표 >

구분	매입·전세임대 I	매입·전세임대 II
지원단가	(매입임대) 호당 평균 1.5억원 (전세임대) 호당 평균 1억원	(매입임대) 호당 평균 3억원 (전세임대) 호당 평균 2억원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
임대조건	시세 30~50% 수준	시세 80% 수준
거주기간	최장 20년	최장 6년(유자녀 가구는 10년)

* 지역별 매입·전세시세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단가 적용

6. 빈집정보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이 무엇인지?

☞ 빈집실태조사 결과 중 빈집 위치, 상태, 임대조건 등 공개정보의 검색·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주거취약계층과 연결한 임대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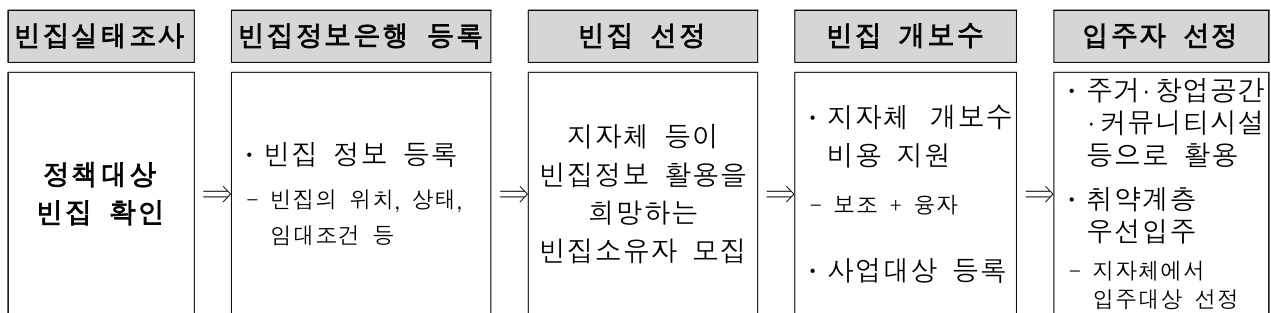
- '빈집정보은행'은 빈집 활용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이며,
- '빈집활용 플랫폼(가칭)'은 시스템 등록 빈집 중 활용 희망 빈집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창업공간 등으로 매칭·공급하는 플랫폼

7. 빈집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 운영 방식 및 도입계획은?

☞ 빈집은행 등록, 대상 빈집 선정 및 개·보수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될 예정이며, 금년 시범공급을 추진할 계획

- 현재 기획단계로 관계기관과 '19년 상반기 중 도입안을 구체화하고, 연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제 시범공급을 추진할 예정

< 빈집매칭 플랫폼 활용(안) >



8.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1천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 입주대상인 대학생 등의 거주형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요금제와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할 계획

- 대학가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대학·사학진흥재단 등이 학교밖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
 - 서울 개봉동에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였으며, 후속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22년까지 총 1만 명을 지원할 예정
- * 4개동 39호 145명 입주(2.27~), 입주자 모집 시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생활 편의시설 및 방범장치도 설치되어 청년층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

* (맞춤형 요금제) 보증금 부담 최소화 및 6개월 단위 계약

** (생활편의시설) 책상, 옷장, 에어컨, 냉장고 등 설치

9.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도입 취지는?

☞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

- 임차인은 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
 -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한 권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의무화 추진

* 소유권등기에 '해당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10.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경우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일괄적인 최소비율 상향이 아니므로 사업성 악화 우려는 적음

☞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구역특성에 따라 의무비율을 추가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업전반의 부진 우려는 적음

- 의무 임대주택 비율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세입자수 뿐만 아니라 주택수급상황 등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비율을 추가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임대주택 최소 의무비율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전반의 부진 우려는 없음
 -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의 범위와 추가부여 사유를 확대함에 따라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비율이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

< 건설정책국 >

1.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 3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와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음

- '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신설안(3조원)이 발표되었고 현재 1단계(1.5조원) 조성안에 대해 공공·민간 투자자들과 협의 중
 -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지역 협력강화를 위해 한-아세안과 한-유라시안 협력펀드를 상반기 중 조성하여 투자 추진 예정

2. 생활안전 중심으로 SOC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사후대응 위주로 시설별 개별 관리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 현재는 시설별로 개별법률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계획 보다는 사후대응 위주로 관리
-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어 유지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시설별 개별관리에서 기본계획, 공통기준을 통한 종합적 관리로 전환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됨
- 국토부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수립하여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15종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유지관리 전략, 투자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게 되며
 - 각 부처는 기본계획, 공통기준을 토대로 시설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소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이러한 선제적·종합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 유지관리 예산 절감, 노후 SOC 유지관리 산업 성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교통물류실 >

1. 교통사고 사망자 수 '19년 3,200명대, '22년 2,000명 수준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패러다임을 개편하고, 중상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지난 해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대비 9.7% 감소한 3,781명으로 최근 둔화된 감소 추세를 크게 상회하였음

* 사망자수(명)(전년대비) : ('13) 5,092(5.6%) → ('14) 4,762(6.5%) → ('15) 4,621(3.0%)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이는 범정부적으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 상향*,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교통안전 제도가 연중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전방위적 홍보가 이뤄진 결과**라고 판단함

* (단속)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도교법, '19.6.25. 시행)
(처벌)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특가법, '18.12.18. 시행)

□ 올해는 사고 시 중상해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부 속도제한 하향에 중점을 두고, 화물 안전운임제, 첨단안전장치 도입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22년까지 2,000명 수준 감축을 위해서는 **연간 13%의 감축**이 필요하며,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함

○ 다만,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교통정책 변화를 토대로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제고된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생활물류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 생활물류 업종 신설, 소비자 보호,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전통물류와 구분된 생활물류만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

- 전통물류와 구분된 '생활물류 서비스사업법'을 제정하여 택배업 및 늘찬배달업(퀵·배달대행)을 신설하고, 종사자·소비자 보호 기반을 마련
 - 「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던 택배업을 분리하고, 제도화가 되지 않은 늘찬배달업을 법제화하여 시장 활성화 추진
 - 사업자(원청·수급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부여하여 운수 종사자 및 터미널 근무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

< 항공정책실 >

1. 스마트시티, 수소도시에 이어 드론도시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지? 어떤 모습인지?

☞ 드론도시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실증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용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함

- 드론 실증도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요구하는 드론 활용모델을 일상 속에 실현하는 것. 예컨대, 골목이 많은 지역에는 '귀갓길 안심 지킴이',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불법소각 배출행위 감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
- 그간 주요시설이 없거나 인구밀집지역을 피한 외곽지역 대상으로 수행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험·실증 공간을 도심지역으로 과감히 옮기는 것이 핵심

* (시범사업, '16~'18) 시범공역 내 '규제완화'로 기술개발 실험 및 활용모델 실증 지원 (규제샌드박스 사업, '18~) '규제완화+재정지원'으로 우수기술 조기상용화 유도

- 대상지역은 사업설명회('19.3.8)를 거쳐 지자체의 수요를 받은 후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할 예정임
- 특히, 드론기술 전문가, 도시 전문가, 해당 사업분야 전문가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의 영향·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지역을 선정할 예정임

2. 先선발 後교육을 조종사에 이어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모델을 경력정비사 양성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채용인원 등 사업규모는 정부-항공사-훈련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

- 高비용 비행낭인을 막고, 조종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항공사-훈련기관이 협업해 '先선발→비행훈련→최종 채용' 제도를 시행중
- 금년에는 항공사 참여와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하늘드림재단을 통한 저소득층 훈련생도 지원('19년 30명)할 예정
 - * '18년 대한항공 등 7개 항공사, 234명 → '19년 8개사(에어서울 추가), 240명
- 정비 분야는 '18년 도입한 실무형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확대 ('18년 B737 기종 → '19년 A321 기종까지 확대 도입)하고,
 - * 1차 수료생(3개 기관) 40명 중 34명 채용, 6명 채용 전형 중('18.12월 기준)
 - 항공사, 정비훈련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 정비분야도 '先선발 →정비훈련→항공사 최종 채용'되는 제도를 금년 중 도입할 계획임
 - 다만, 조종에 비해 정비분야는 협의기관(전문교육기관, 항공사, MRO업체 등)이 많아 구체적인 사업규모 등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확정될 예정

3.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탑승수속 서비스 확대 계획은?

☞ 탑승수속시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시행중이나 탑승구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 국제선에도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18년부터 김포·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인천 제외) 국내선에서 승객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정맥, 지문)를 수집하여 탑승수속에 활용 중*
 - * 김포·제주공항은 '18.1월, 김해·대구 등 나머지 공항은 '18.12월부터 시행 중
- 현재 국내선 출국장에서 시행중인 생체인식 서비스를 탑승구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19.10월부터 김포공항 시범운영 예정
- 인천공항 국제선의 경우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얼굴, 지문) 등을 활용하여 생체정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토록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예정('19.하)

< 도로국 >

1.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수준은?

☞ 재정 고속도로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현재는 재정고속도로의 약 2배 수준으로 운영 중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재정으로 수준까지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됨

* 관리운영권 연장 방식, 기간연장+투자자변경(서울외곽방식) 등

○ 민간사업자와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에 착수('19.2)하였으며, KDI·기재부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연내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임

< 철도국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시행시기 및 자격기준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중 (이헌승 의원 발의안('18.4.23) 국토위 소위 계류)

☞ 운행안전관리자는 전문기관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임

□ 현행 법령상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의무배치 규정이 없어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배치여부를 결정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 철도 운행선로(인근)에서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 및 운영토록 제도화 필요

* 이헌승 의원안 '18.4.23. 발의, 현재 국토위 소위 계류 중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은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
 훈련과정(120시간*)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할 계획임

* 철도안전관리 관련 6과목(열차운행 통제, 운전취급 규정, 선로지장 취급
 절차, 직무안전관리 등)을 3주간 120시간(1일 8시간) 동안 집합 교육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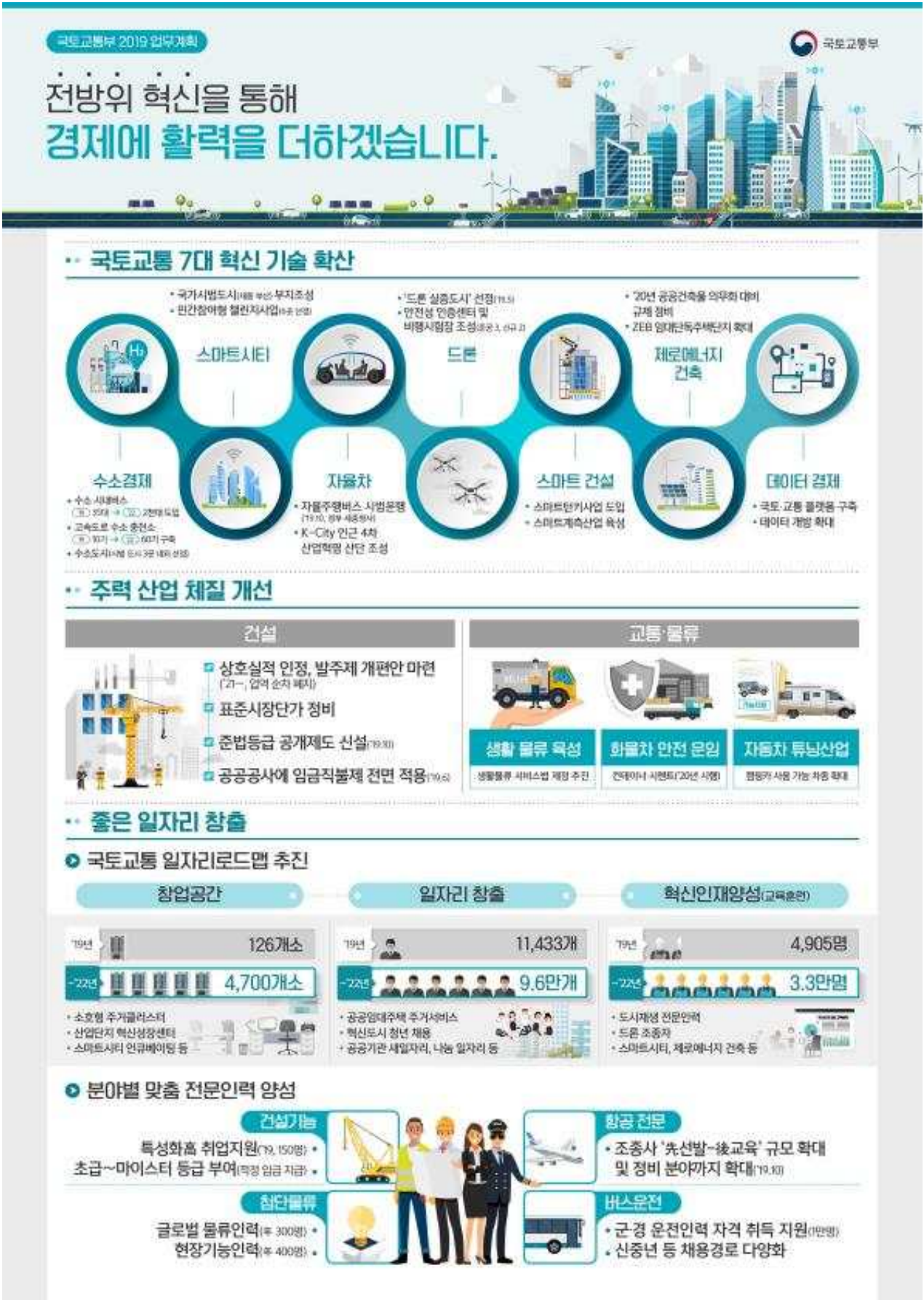
- (역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 * 건설작업 시 작업일정 조정 또는 안전장비·시설 등의 점검,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2. 철도공단·공사 합동 '(가칭)철도시설합동관리단'의 역할은?

☞ 양 기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시공단계부터 안전
 문제 공동확인 등 안전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안쟁점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안전 취약시설의 관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기준 강화 등 시설
 안전업무를 합동 시행하고, 양 기관의 갈등도 조정함

- (중점관리 대상 특별관리) 대형 철도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노선별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시행
- (시설안전 사각지대 해소) 양 기관 간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점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역본부 이행실태를 점검
- (안전기준 개선) 운영 중 발생하는 고장, 장애, 하자 등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설계·시공 중인 사업에도 반영
- (갈등·쟁점 조정) 설계, 시공,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 과정에서 발생
 하는 양 기관 지역본부별 현안 쟁점의 합리적 조정 및 총괄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중심의 SOC 관리 강화

노후 SOC 체계적 관리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재난 대응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전 위험요소 발굴(19.4) 및 신속 보강 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19.12) 기반시설, 지하시설물 등 총 15종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확대 구축(19.20) (광역시, 23개 시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다중이용·노후 시설 3종 시설물로 지정·점검(19.10) 방화문, 내화충전구조 품질인정제도 도입(19.10, 10개시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인명피해 우려 건축물 보강 지원(19.6억) 다세대 주택 등은 저리용자 지원(500억원) 지진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내진성능 간소화 평가 시범 추진(19.6) 주요 SOC 내진성능 확보(19, 96.9% → 21, 100%)

근로현장의 작업자 안전 제고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 감축
17년 506명 → 19년 400명대 → 22년 250명대

추락사고

- 사고저감 종합대책 수립(19.3)
- 시스템작업대 사용 의무화(19. 공공 → 20, 민간)

건설기계

- 검사제도 종합 개선(19.9)
-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굴착공사

- 사전 계획계획 수립 강화(19.6)

사업자 대비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 부여(19.12)
항공 승무원 피로관리(19.10~)

민간작업장

-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 시행(19.4~)
- 고속도로 작업장 사고방지 대책 마련(19.3)
- 철도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공공작업장

예방적 교통안전 강화

보행자가 우선 되는 교통안전	철도안전	항공안전
<p>교통사고 사망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4,185명 19년 3,296명 22년 2,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부 60~50km/h 속도 하향 조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교통안전 평가에 추진실적 반영 화물차서비스 모바일 운행기록장치 시범사업(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화물차 차령관리제도 도입(19.10) · 전세버스 안전 관리 강화 취약 도로지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잦은 곳(80개소), 위험도로 구간(207개소), 야간사고 다발지점(342개소) 	<p>운행 1억km당 사고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6.0건 19년 4.5건 22년 3.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정밀안전진단 의무화(19.6) 노후 부품 등 전면 정비·교체(19.1~)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p>100만 비행 당 사고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2.332건 19년 2.0건 22년 1.54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유형별 안전 지표 개발·모니터링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 확대(19.2~) 회항 등 돌발상황 신속지원 모의훈련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신규사업 수시 선정(100곳 내외)
'19.3월부터 조기 선정
- 사업 절차 간소화·승인방식 도입
사업 선정+계획 수립 절차 통합
- 혁신·구도심 거점에 혁신지구 지정(3곳 내외)
- 창업·복합기능 영커사설 본격 조성(30곳)
- 금융·청년 등을 위한 특례보증 신설

▶ 사업 속도 제고

혁신역량 강화 ▶

▼ 생활 SOC 제공

참여 확대 ▼

-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 적용
- 생활SOC 복합시설 브랜드사업
(생활형 어울림센터) 추진('19.3~ , 20여곳)
-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채용(240명)
스타트업 경진대회('19.3~), 청년 네트워크 지원
- 상생협력상가 200호 본격 공급('19.1~)
환산보증금 기준 상형('19.4, 90~95%) 등 맞춤형 보호

지역투자 활성화

지역 투자 패스트 트랙 지원

- 캠퍼스 첨단 산단 조성
규제개선 부처 협업사업 등
패키지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착수
중앙-지방정부 협약체결('19.5)
- 고용·산업 위기지역
인프라 사업 지원
총 12조 7,850억원, 464만여 명 조기착수



인프라 확충

- 도로**
* 수도권 광역 도로교통망 등
간선망 247km 착공
- 철도**
*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19.7. 기본계획 착수)
- 공항**
* 가점 공항 시설 확충,
지역사회 협력 신규공항 추진

균형발전 사업 성과가시화

새만금 · 공공수도 매립 착수(24 완공) ·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행복도시 · 신청사 착공지원(남사설계 '19.10) · 광역권 상생협약체계 강화('19.3)	혁신도시 시즌2 ·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19.6.28개청) · 도시별 발전계획 실적평가
--	--	--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교통 미래비전

미래이슈를 반영한 2040 분야별 중장기 비전 '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확정('19.11)	'21~'40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 수립 착수('19.6)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비전 마련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부문별 협력전략 마련	'판문점선언, 합의사업 등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 추진
---	--	---	-------------------------------------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신혼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국민임대 행복주택 특화단지 추진 국민임대 6천호 입지확정(19.3), 행복주택 2곳 입주 매입-전세임대 II 첫 공급(유형별 2천호) 구입-전세자금 지원(8만 가구)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신혼희망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근거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6) 희망상가(800호), 가속시행 청년주택(1천호) 공급 취약계층 및 중기 취업 청년 5.3만명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고령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복지 주택 1천호 사업 승인 공공리모델링주택(1천호) 공급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 헬스 케어 주택 적용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천호) 공급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 임주지원 강화 주거급여 소득기준 급여 상한 인상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공정한 민간 주택임대 시장 조성

<p>임대차 정보인프라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일체정보 및 상시 모니터링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p>등록임대 사업자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의무 이행과 세무·회계 연계 임대조건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p>임차인 권리보호 및 편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임대주택 부가등기 의무화 모바일·인터넷 전세보증 가입 활성화
---	---	---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광역교통체계 효율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19.3)

M-버스 노선 및 운행범위 확대
(수도권 → 광역권, 19.7)

교차로 구간 정지 없이
이동하는 Super-BRT 도입
(19.1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급 속도 제고



-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19.6),
신안산선 착공(19.8)
- 경부선(서울-천안) 개량
급행열차 운행 확대
(제) 日 34회운행 → (제) 日 54회 이상

· 교통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교통 공공성 강화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18.8) 이행
- 구리-포천(3,800 → 3,600원, 19.7), 천안-논산(19.12)
- 민자도로 서비스 개선 및 관리-감독 자율 전문기관 지정(19.8)

- 고속·시외버스 정기·정액권 상품 개발
- 광역일일교통카드 도입 확대
(서울-울산·천주 → 대전·계주·인천·경기 등)



- 열차 운임 할인 확대(19.1~)
- 코레일 : 다차녀(3인 이상 → 2인 이상), 유아(4세 미만 → 6세 미만)
- SRT : 기초 수급자·다차녀(3인 이상)·임산부 할인 도입

교통 서비스 향상



-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
(18) 115km → (19) 85km → (20) 55km
- 하이패스 IC 25년까지 100개소 확충
충주휴게소 IC 증설 및 4개소 확충(19)



- 열차지연 보상 개선(19.6)
수기 교통비용 보상, 취소-환불 위약금 면제
- 모바일 승차권 반환 개선(19.6)
열차 출발 후에도 앱으로 반환 가능토록 개선



- 생체정보 이용 탑승수속 서비스 확대
- 항공기 지연 기준 국제수준 개선
인천공항 시범 운영(19)

· 이용자의 권리보호 강화

·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플랫폼서 확대



'교통기본권' 도입
(관련법 제정안 발의, 19.12)

휠체어 탑승 고속
시외버스 시범 도입
(19.10, 4~7개 노선)



공공형 택시, 콜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62개 사업, 552억원 지원)

· 자동차 리콜혁신



제작사 책임강화

자료제출 의무 강화,
정밀적 손해배상 과정급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유관기관 정보공유,
리콜요건 명확화



조사기간 보장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전문성 강화



공공안전 확보

공공안전 위협시
운영제한, 판매중지